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기자회견

2019.09.02.

청와대 분수대 앞

[주제1]

비정상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수호와 시장경제원칙 회복

[주제2]

공직자 특수이익 추구혐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지명 철회 촉구

[주제3]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경제폭망·안보폭망·외교폭망 막아내자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기자회견 구호모음

- ①비정상 장기요양제도, 시장경제원칙 회복하라!
- ②보건지부장관이 약속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안 마련하라!
- ③재지정제 등 출구없는 규제강화 폐기하라!

- ④국가 주도 불공정거래 재가사업, 즉각 중단하라!
- ⑤위험적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의무화고시 즉각 폐기하라!
- ⑥예고없는 돌봄사업 중단, 유예기간 및 대안 마련하라!
- ⑦노동조합 편드는 고용노동 정책 개혁하라!
- ⑧구직난 요양보호사 해결위한 요양보호사 2급제도 실시하라!
- ⑨공포 현지조사제도 개선하라!
- ⑩특수경찰제도입법 철회하라!

- ⑪조로남불! 후안무치! 국민정서법위반! 공직자 특수이익 추구혐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지명 철회하여 공정사회 구현하라!

- ⑫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원칙 회복, 헌법정신 준수통해
자유민주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국가 폭망 막아내자
(NO further Left Turn)

기자회견문

비정상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수호와 시장경제원칙 회복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된 지 11년째입니다. 그 동안 장기요양 분야의 수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적 수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수년간 연속 성과를 이루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배경에는 장기요양기관 수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공로가 있었음을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앞에서 언급한, 질적 성장의 근본이 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기여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고질적인 부정수급과 불법행위, 노인학대 등 불법의 온상으로 여론화 한 후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공공기관의 확충과 민간기관의 퇴출을 유도하는 각 종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설립 법도 국회 통과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4~5군데 광역 시도 단위로 시행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민간을 참여시켜 놓고,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만들어 민간기관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수가 외에 그곳에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별적으로 특별지원함으로써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 현재 60% 이상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제1부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이나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재지정제도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 영락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민생보호 차원에서 철폐 해주기를 대통령님, 언론인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촉구하며 탄원드립니다.

기자회견 핵심 주제 내용

주제1: 비정상 장기요양제도 개선

질의1: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약속 불이행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설치신고하고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 기관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강제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 상기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 난다하여 2018년 3월 29일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부터 근 6년 동안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 해왔습니다.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의 제,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재무회계 규칙 강제 적용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8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을 위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무렵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10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이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https://youtu.be/MjFwRMIHKPY>),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박능후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겠다’ 는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youtu.be/d3gmNQESd0Q>)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년이 다가오는 현재에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 입법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반대’라는 당론을 정하여 폐기 되었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2019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부적절한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의 강제 준수를 명시한 고시 폐기

정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과 더불어 사영기업의 고유영역인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시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킬 수 없는 방문요양의 적정비율을 86.4%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은 이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정부는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당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와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나눔협회에서 이 고시에 지정한 방문요양기관의 인건비 적정비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하여 2심에 항소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판결이 지속적으로 유보되면 10월 이후 제2심의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현재 방문요양의 적정인건비 비율의 준수 실태는 ‘90% 이상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공식 보건복지부 소식통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와 최민정 과장은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 주체 국회 세미나에서 ‘직접인건비 적정비율의 준수문제는 현재 위반사항을 처벌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후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재가 방문요양기관 센터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적정비율 실태조사에 대하여 지난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한 실태조사가 아니며,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대하여 사영기업이 분명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화 하다보니 회계전문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실제 결산 후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 인건비비율 고시를 폐기 하여 주십시오.

질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등 출구없는 규제강화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기관은 2025년 재지정 신청)

지정제나 시군구청장이 6년 주기로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갱신 신청을 받아 갱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①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② 시설 및 인력 기준
- ③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 ④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⑤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재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을 경우 절차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의 신고필증 발급 후 이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신 후 이를 다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시군구 소속 관계 공무원1명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함 사람 4명 이내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심사에 통과된 노인복지시설만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지정 기준의 설정은 시군구청장의 전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노인복지시설은 설치하고서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현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60% 이상이 12월12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장기요양기관을 탈출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말하자면 기존 기관의 경우 필요시 출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이와 같이 현장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시되는 지정제 또는 갱신지정제도는 자칫 어렵게 마련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지정제, 재지정제의 유예, 또는 폐기를 촉구합니다.

질의4: 국가주도 불공정거래, 재가장기요양기관 공유화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약속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원으로 채용,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핵심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실천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소요예산의 과다 및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 불발, 현실적인 공약추진의 장애물 등이 문제가 되어 명칭이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회서비스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의 범주도 변경이 되어 전체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재가 장기요양 기관 등 소규모 기관으로 축소되고, 전체 기관이 대상이었던 것이 새로 설립되는 국공유 사회서비스 법인기관만이 대상이 되어 당초 계획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립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전국적인 실시를 못 하게 되고, 4!5개 광역시도에서만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계획을 세우고 직원 모집을 시행하고 있으나 ①직원을 먼저 뽑아놓고 사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등 혈세 낭비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②일부는 기관장만 뽑아놓고 추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부천을 위시한 몇 군데 지방자치에서 공공 통합재가 사업이나 강릉의 경우 공공 치매전담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공공 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성공할 수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움직임이 전형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민간을 참여시켜 놓고,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어 그곳에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수가 외에 기존 민간기관과 달리 차등화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 발생은 전형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로서 중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사업에는 국가의 조세를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전체의 예산 책정 측면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형태로 장기요양기관의 체제가 운영되는 경우 주인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탁상행정식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질의5: 예고없는 돌봄사업 중단, 유예기간 및 대안 마련하라.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하여 지금까지 장기요양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였던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장기요양 기관들은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재가 노인지원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일부지자체) 등의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체가 되는 시설에 전담화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변경에는 ‘이해당사자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과 ‘실직자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상존합니다.

①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는 국가가 수행할 공개념의 노인복지 영역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해온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돌봄 서비스 업무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 기관 사업자에게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장기요양 기관이 고유의 방문 요양서비스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장과 환경 구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2019년 초기 현지 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사업자가 겸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다 하여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반기관에 대한 환수나 처벌을 유보하는 대신 2020년부터는 장기요양 기관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금지하고 이를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영역의 사회복지법인(종합복지관)등에 위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②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변경을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변경을 하는 행위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시장 안정화와 어르신들의 질높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민간 장기요양 기관의 큰 노력과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자유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②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재가 장기요양 기관들은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장비와 인력 투자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중단으로 돌봄사업 종사자들에 처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 기관에서도 노인돌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실직자 방지 목적의 민생 생계 보장을 위해 2~3년의 유예기간 설정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질의6: 민생고통 줄여주는 시장중심 정책 강화하라.

장기요양 기관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노인복지사업의 일종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민간인들이 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장은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하여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동종 타 산업에 비해 80% 수준인 어려운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사업자들은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만, 지나친 규제와 엄격한 법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현지 조사, 현장 지도 감독 대비 등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심한 정신질환 이상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보다 못한 장기요양 시장의 실정을 이해하고 민생고통 줄여주는 시장중심 장기요양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민간 장기요양운영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장기요양정책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를 위한 현지 조사 제도를 개선하라

일주일 전 사전 조사 예고를 시행하고, 과도한 감산 제도에 의한 환수제도 개선, 단순 행정실수와 비고의적 오류 등을 배려하는 현지 조사 환수와 행정처분 수준 정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②요양보호사 구직난 해결을 위한 요양보호사 2급 제도를 시행하라.

- 현재 우리나라에는 139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가 있고, 약 3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구직난에 기관장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제때 구하지 않으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감산을 당하게 됩니다.

- 제도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시험을 보지 않고 실습만 하면 되던 것이 시험을 보고 실습을 해야 자격 취득을 하는 시험제도로 바뀌면서 자격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 이에 따라 시험제도를 완화하고, 요양보호사 2급 제도를 신설하여 자격취득의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노동조합 편드는 고용노동정책 개선과 특수사법경찰 입법 폐기하라

주제 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철회로 공정사회 구현하라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의 청문회를 접하면서 국가가 두동강이 날 정도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조국 장관 후보가 되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장관 청문회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개인의 자격으로 민정수석을 할 때는 청문회가 필요 없었지요. 그렇지만 국가의 최고 국무위원의 자리인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을 때는 입장이 다르게 됩니다. 공인으로서 능력외에도 주변 털이를 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딸의 논문 문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온 가족이 연루된 의혹, 국가 전복을 추구했던 사노맹 관련 의혹, 배우지의 조세탈루 의혹 등만 고려해도 여당의 리더들이 조국 후보를 지키기 위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말만으로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조국에 대하여 여론이 나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조로남불, 즉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조국의 적은 바로 과거의 조국이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처벌 말했던 조국 후보의 거룩한 모습이 이번 장관 후보지명으로 인해 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정서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특수이익 추구혐의'입니다. 이미 의혹이긴 하지만 가족이 중심이 된 사모펀드와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의 의혹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 분야 일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사유는 사노맹 활동입니다. 이전 같으면 감히 장관 후보에 오른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할입니다. 국가 전복을 꿈꾸며 형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겠습니까? 지명철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규모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그것은 문제인 대통령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주제 3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경제폭망·안보폭망·외교폭망 막아내자

최근 연달아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핵심물자 수출제한 결정 (백색국가 제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토 침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침투,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붕괴, 이러한 이상 정세로 인한 주가 하락과 달러 인상 등 경제적인 불안정을 포함한 수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배들이 쌓아놓은 강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외교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념과 목표를 위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싸우지만, 정치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싸움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경제폭망, 안보폭망, 외교폭망으로 하류 국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현재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 보자면, 좌파대통령, 좌경화 정부, 좌경화 여당, 좌경화 사법부, 온통 좌경화된 지도자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을 향해 종북하고, 북한은 그리 생각하지 않는데 일편단심으로 기승전 북한을 향해 김정은 화나지 않게 행세하는 위정자들이 문제입니다.

나라를 폭삭 망하게 만드는 이런 갈등구조를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은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당시 취임사 내용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째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게을리했고, 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지난 정권의 대법원장이나 국무위원들조차 적폐세력이라는 이유로 잡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겠다는 기본적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식민통치 이후 둘로 분단된 나라에서 수백만의 국민과 참전국 병사들이 죽는 전쟁을 경험하고, 그 후 수십 년동안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저지른 나라, 그리고 지금은 핵과 미사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는 장병들의 기강을 해이 시키고, 한국과 미국의 국방협력(한미합동훈련 폐지)을 약화함으로써 전대미문의 전략을 통해 국방력을 스스로 감소시키고 적국의 핵공격 위협을 더욱 가중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기소미아의 파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 보위하고는 거리가 먼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이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자유민주적인 통일 보다는 우리 국방력과 국가수호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킨 후 연방제 등 적화 통일을 수월하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다른 적국의 군인들이 배를 타고 우리 영토로 넘어와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국가적 안보망을 파괴하였습니다.

상대 적국이 미사일을 쏘아도 아무런 항변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적국의 우두머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비하하고 욕을 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적국 우두머리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주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영토를 침범해도 아무런 대응조치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참모들은 ‘러시아와 중국 중국 정부가 사과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탄로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군용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영토를 침범한 다른 나라의 군용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려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유권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기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취임 3년 째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겼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는 집권을 도운 민주노총과 주사파 등 좌파세력을 위한 일들만 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적국으로 되어있는 나라를 돕고 있는 소위 용공 주사파 리더들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둘러싸고 있고, 비서실장에 임명하였습니다. 대부분 용공 주사파 리더들이 수석비서관과 국무위원, 행정관들로 대통령 궁을 채웠습니다.

촛불혁명의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빛을 받기 위해 파괴적인 무력시위를 해도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하고 2년 만에 근 20% 이상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런 기습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여당의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준수하자고 외쳤던 ‘장관 청문회’에서 청문회 의원들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위인들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로 좌파 경향의 활동을 한 자들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전 정권의 대법원장조차도 감옥에 보냈지요? 자신의 생각과, 틀린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로 몰더니 급기야는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개인 피해 보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과 발생한 분쟁을 조기 진화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일본과 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같은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주어 우수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IMF와 같은 위기를 경험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세력을 다시 친일파로 몰아 신적폐세력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회자되

는 당 연구원의 젊은 원장이 전체 여당 위원들에게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총선까지 연장하여 다시 집권할 수 있는 도구로 삼자는 보고서를 돌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긴 이야기의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서약한 어떤 것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가를 보위하지 못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 당선과 취임은 대통령 선거시절에 후보 M의 국정철학과 신념 등이 반영되어 선거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여 헌법을 위반했고, 주적인 북한을 위한 용공행위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진하여 국가 보위를 게을리 한 점, 그리고 주적국가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채 일본을 주적으로 본 반일 행적으로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점들을 들어 탄핵을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사파 등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 재판소에서 들어야 할 예상 판결문이지만, 이미 삼권분립 정신을 어기고 좌파 재판관들로 채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일반 서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러하였듯이 이 시점에서 좌경화를 멈춰주십시오. 그 길만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No Further Left Turn’ 더 이상의 좌경화는 안 됩니다.